



주간통일정세 2009-31(2009.07.27~08.0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7/30,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63주년을 맞아 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김 위원장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방적종합직장, 편직사직장, 염색종합직장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화된 공장시설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중앙방송은 소개
- 김 위원장의 이날 현지지도는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일에 맞춰 의도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인 평양방직공장을 방문,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현지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당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정전협정 56주년 공연 관람(7/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7.27) 56주년을 맞아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고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냈으며, 합창단의 훌륭한 공연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언
-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군고위 간부들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과 당 중앙위 부장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당·정 고위간부들이 수행

● 김정일 혈액 투석 치료중(7/30, 평화방송)

-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당뇨성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에 크게 문제가 생겨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씩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중국방문 당시 체중이 빠진 듯 보이나, 손이 크게 붓고 탈모가 진행된 모습이 촬영돼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음.
- 하 대표는 이어 건강 문제로 김 위원장이 자신감을 잃어 후계자 문제



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올 초에는 김정은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5월 핵실험 이후부터 군대와 당 조직을 중심으로 김정은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당과 군으로 확산됐다”고 설명, 하 대표는 “소식통으로부터 ‘김정일의 파워가 100이면 지금 김정은의 파워는 한 20정도’라는 비유를 들었다”고 언급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공포 경계(8/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일 ‘제국주의의 반동적 공세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내부 와해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 빠지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이어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은 생사를 결정하는 판가리(판같이) 싸움”이라면서 “제국주의에 굴복하면 노예가 된다”고 지적하고 “사생결단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높은 사상적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는 동시에 정치적 역량과 군사적 역량의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것을 요구

● 연안호 나포 사흘째에 보도(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800 연안호’의 나포 사실을 나포 사흘째인 1일 뒤 늦게 보도, 통신은 “조선인민군 해군 경비함이 7월30일 동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침입한 남측 선박 1척을 나포했다”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보도에서 특히 연안호가 “영해 깊이 불법침입했다”고 강조, 북측은 7월 31일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현재 연안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원들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

●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 여원구씨 사망(7/31, 조선중앙통신)

-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인 여원구(81)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의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통신은 그러나 려 의장의 구체적인 사망 일시와 사인 등은 밝히지 않음.
- 려 의장은 1928년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운형 선생의 셋째 딸로 태어나 1946년부터 8년간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한 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교육부 차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국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 그는 2002년 남한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 언니인 려연구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등을 지내고 1996년 9월 사망

● **강반석 사망 77주년 현화행사 개최(7/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모인 강반석 사망 77주년을 맞아 31일 칠골 혁명사적지 동상과 만경대 묘소에서 현화행사가 열렸다고 중조선양통신이 보도, 행사에는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

● **北TV, 南화면 편집해 “南 비참” 선전(7/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29일 저녁 남한 방송사 프로그램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담은 장면만 골라 편집해 10분 정도 화면을 방영하면서 “절대 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없다”는 식으로 선전
- 조선중앙TV는 ‘위기의 남조선, 비참한 민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연합뉴스 인터넷방송을 비롯해 KBS, MBC, SBS, YTN에서 방영한 동영상들 가운데 실업난과 재개발 지역 주민의 생활, 버림받는 노인, 노숙자, 용산 참사, 의료비 문제, 교육비, 개인 부채문제, 자살문제, 연쇄살인 사건 등을 다룬 화면만 편집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
- 중앙TV의 내레이터는 “오늘 남조선 경제는 세계적인 원유파동,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동란에 휘말려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해서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대 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없다”며 프로그램을 시작, 이 방송은 남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가운데 인터뷰 대상자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방송의 금기어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북한 안방에 전달되는 것도 감수

● **北, 정전협정 56주년 다채로운 행사 개최(7/2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56주년을 맞아 27일 다양한 행사를 개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평양시내 당창건기념탑과 4.25문화회관 광장뿐 아니라 평안북도 신의주시, 함경남도 함흥시, 자강도 강계시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됨.
- 조선중앙통신은 무도회가 김일성 주석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고”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따라 반미대결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힘있게 과시할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주장
-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도 이날 정전협정 체결 56주년을 맞아 “인



민군 영웅열사묘”를 찾아 헌화

- 조선중앙방송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56돌에 즈음해서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27일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을 찾았다”고 소개,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에도 이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찾아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은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육해공군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조선중앙TV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 인사들이 출연한 가운데 ‘천출명장 높이 모시어 위대한 전승의 역사는 영원하리’ 제목의 방송모임을 개최

● 北외무성, 북핵 해결 대화방식 따로 있다(7/27, 북 외무성)

- 북한 외무성은 27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6자회담 복귀 종용에 대해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를 남들이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는 그런 나라로 보려는 것부터가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언급
- 대변인 담화는 7월 23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부 나라들”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을 가리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6자회담이 왜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6자회담 불참 배경을 설명
- 담화는 “6자회담은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하여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회담”인데 지난 4월 북한이 “평화적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앞장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6자회담의 생명이었던 이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
- 담화는 “이로써 6자회담은 우리의 평화적인 과학기술개발까지 가로막아 정상적인 경제발전 자체를 억제하는 마당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로 근근이 연명해가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6자회담을 통해 노리는 다른 참가국들의 속심”이라고 주장
- 담화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까지 백주에 강탈하려드는 무모한 짓만 벌이지 않았어도 사태는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거듭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탓하며 맺음.



다. 경제 관련

● 北 경제재생 분야별 수치목표 전 당원에 통보(8/2, 마이니치 신문)

- 북한이 김정일(金正日·67)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 이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고 유력 후계자로 부상한 3남 정운(鄭雲·26)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제재건 캠페인 ‘150일 작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확인됐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5월에 시작된 150일 전투 개시 2개월 전에 분야별 달성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만들어 전 당원에게 지시, 그러나 4, 5월 들어 로켓 발사 및 핵실험 때문에 대외관계가 악화한데다 북한 내부의 인프라 노후화 등의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이들 목표의 달성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
- 신문은 “경제목표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자로 작성한 비밀 취급 문서 ‘전 당원에 보내는 비밀 편지’에 기재돼 있다”며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자는 ‘당 본부가 전 당원에게 구체적인 달성 목표 수치를 알리는 것은 희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전언
- ‘경제 전선의 당면 기본 전투목표’로 ①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송)에 힘을 집중해 경제 전반을 상승궤도에 올린다 ②식량 문제 완전 해결 ③국가 경제의 기술집약형으로의 전환 등을 열거, 그리고 4대 선행부문에 대해서는 전력 776만kW 생산능력, 석탄 생산 3,500만t 수준, 철도 화물 수송능력 7,320만t 수준 등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 식량의 경우 곡물로 올해는 600만t, 그 이후는 700만t이라는 목표를 제시

● 北, 기초식품 공급 전산화, 자동공급기 보급중(8/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조선(북한)의 상점 경영에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봉사의 세부 업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동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공급 업무를 맡은 칠성문식료품상점이 컴퓨터로 조작하는 ‘기초식품자동봉사기’를 이용해 간장, 된장, 기름, 달걀, 고기 등 기초식품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
- 고(故)김일성 주석 생일인 지난 4월15일 칠성문식료품상점에 첫 도입된 이 기초식품자동봉사기는 북한 전역의 모든 식료품상점들에 보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과거엔 주민공급대장에 세대수와 세대별 연간 배급량, 이미 배급한 양과 앞으로 공급할 양, 배급가격과 공급날짜 등을 기록했으나 전산화를 통해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기초식품을 ‘자동저울’로 달아 “신속·정확히” 공급한다는 것



● **北 첫 패스트푸드점, 지점 개설계획 밝혀(7/30, APTN)**

- 북한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평양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어 조만간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삼태성의 지배인이 30일 밝힘. 삼태성의 고종욱 지배인은 이날 APTN과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연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음식점은 시민들 및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차 (평양) 시내 여러 곳에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언급

● **北, ‘광물수출’ 단천항 현대화에 박차(7/30, 평양방송)**

- 북한은 29일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함경남도 단천지구의 단천항을 “현대적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궤기모임을 갖는 등 단천항 개발에 본격 나섰다. 단천은 연.아연 생산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가 있는 광산지구로, 단천항 현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29일 현지에서 열린 궤기모임엔 장관급인 라동희 육해운상이 참석해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 김정일 위원장은 올해 이미 2차례 단천을 시찰하고 단천항 현대화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단천항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실제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했었음.

● **고립된 北, 믿을 곳은 중국, 무역 급증(7/30, 연합)**

- 핵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올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3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다둥(大東)항 세관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은 71만8천t(무역액 9천617만6천 달러)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1.9% 증가(무역액 268.4% 증가)했음.
-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 화물은 70만1천t(6천716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78%(무역액 306.1%) 증가했으며 대북 수출 화물은 1만7천t(무역액 2천901만6천 달러)으로 550%(무역액 206%) 늘었음.
- 북한에서 반입된 상품은 무연탄과 철강재가 주종을 이뤘음. 무연탄 수입액이 4천622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8.5%를 차지했으며 철강재가 598만9천 달러(8.9%)로 뒤를 이음.
- 대북 수출품은 기계류가 1천436만9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200% 폭증했고 옥수수과 쌀 등 농산품도 1천144만2천 달러를 기록, 40.2% 증가,
- 중국 개인기업의 무역액이 8천572만2천 달러로 330% 증가하면서 전체 대북 무역의 97%를 차지했으며 국유기업 무역액도 749만3천 달러로 1천% 급증



● **민주조선, 이모작, 전역으로 확대중(7/24, 민주조선)**

- 북한이 식량난 극복을 위해 증산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조선은 “두벌농사(이모작)”는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도”라며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
- 민주조선은 24일 ‘우리 당의 두벌농사 방침의 정당성’이라는 글에서 산이 많고 경작지가 제한돼 있는 북한이 “현 시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면 부침땅(경작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벌농사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두벌농사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모작이 “논에서만 아니라 밭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별방(평야)지대에서만이 아니라 북부 고산지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WFP, 식량운송비 北정부 유입보도 과장(7/30,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 예산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비의 상당액이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 갔다는 미국 폭스뉴스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WFP가 반박
-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27일(현지시간) WFP의 대북 구호 프로그램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며, WFP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1월 말까지 총 5억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에 63만t의 식량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1억3천500만 달러를 식량 운송비용 및 유류비로 배정, t당 206.9달러의 터무니없이 비싼 운송료를 책정했고 이중 상당액이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WFP 로마 본부의 그레그 배로우 북한담당관은 “폭스뉴스가 입수했다는 보고서는 석유와 곡물 가격, 국제운송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2008년 중순 당시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만든 일종의 계획일 뿐”이었고 약 3개월 후 국제운송 비용이 하락세로 접어들어 실제로는 t당 35~40달러 수준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그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소유 선박을 이용하는 다렌-남포 구간의 운송비용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WFP가 지원사업을 펼치는 해당국의 운송수단을 쓸 때 해당국 정부에 운송료 일부를 수수료로 내는 관행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에 내는 수수료 t당 8달러는 “우리가 구호사업을 벌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

● **EU, 대북 제재 별개로 인도적 지원 계속(7/30,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유럽지원협력실



(AIDCO)의 에드리아나 로조바 아시아지역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로조바씨는 “EU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체적 대북 제재 조치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인도적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서도 제외된 사안”이라고 언급, 따라서 EU가 지원하고 있는 대북 사업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도 논의 중이라고 소개
- EU는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6개의 유럽의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안보 및 농업관련 복구 사업,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

● **北 휴대전화, 6개월만에 약 5만명 가입(7/29,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에서 2008년 12월15일 이집트의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시작한 휴대전화 서비스에 6월말 현재 4만8천명이 가입,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소리 방송’은 29일 오라스콤의 최근 발표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오라스콤은 특히 현재 평양 중심으로 된 통화 가능 지역을 올해 말까지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 오라스콤이 75%, 북한이 25%를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외에 통화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해 나가고 있으며 ‘고려링크’ 가입자 수는 3월말 현재 1만9천208명임.
- 오라스콤은 현재 북한에 114개 휴대전화 기지국과 1개 이동전화 교환국을 설치했으며, 평양 시내 2곳의 고려링크 봉사소가 신규 가입자 접수와 휴대전화 개통, 선불통화카드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북한의 조선체신회사 3곳에서도 선불통화카드를 판매중
- 오라스콤은 특히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는 북한내 외국인들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용 고속패킷접속(HSPA) 서비스가 곧 개시될 것이라고 밝힘.

● **北 최대간척지 복구사업 8월 완료(7/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최대의 간척지로 알려졌으나 농사를 짓기 어려울 만큼 황폐화됐던 평안남도 서해안의 금성 간척지에 대한 복구사업이 프랑스의 국제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도움으로 8월말 완료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이 단체의 알렉산더 데보르트 북한사업 담당관은 복구 공사 완료되면 그동안 관리 소홀과 기술 부족 등으로 쓸모없는 땅이 됐던 금성 간척지가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복구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언급
- 그는 특히 “이번 복구로 금성리 중악노동지구의 농장과 금성지구



농장에 거주하는 7천여 명의 주민이 일자리를 얻고 식량을 공급받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14만 명에 이르는 온천군 주민의 식량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소개

● **北 함남 마전에 ‘호화’ 호텔 준공(7/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명승지인 마전유원지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세계적 규모”의 마전호텔이 새로 건설돼 27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
- 이 호텔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침실들과 식당, 실내 물놀이장, 한증간, 목욕탕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고 해수욕장까지 갖춰져” 있다고 방송은 소개해 북한식 리조트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임.
- 준공식에는 김영일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등이 참석함으로써 북한 기준으로 “노동당 시대를 빛내이는 창조물들”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규모임을 시사
- 함흥시 교외에 있는 마전유원지는 299만3천700㎡의 부지에 기존 건물로 연건평 3천800여㎡인 16동의 휴양각과 13동의 공공건물, 해수욕장, 보트장 등을 갖추고 있고 서흥소년단야영소와 마전관광휴양소가 있는 북한 동해안의 대표적 휴양지로 알려짐.

라. 군사 관련

● **미얀마, 北 도움으로 핵무기 제조(8/1, 시드니모닝헤럴드)**

- 미얀마 군사정권이 북한의 도움으로 앞으로 5년 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고 비밀리에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현지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일 보도
- 이는 호주국립대(ANU) 전략문제 연구학자 테스몬드 볼 교수와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 출신 호주인 언론인 필 소튼이 지난 2년 동안 태국에서 2명의 미얀마 망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이 신문은 전언, 이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북부 라웅나잉 산악지역에 동굴을 뚫어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아리랑공연에 ‘강선의 봉화’ 삽입(8/2, 조선중앙TV)**

-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 2009년 판에 ‘강선의 봉화’를 형상화한 장면과 “날로 변모되는” 북한의 모습을 담은 장면 등이 새로 포함된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
- 집단체조창작단의 립칭에 창작가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2장 6경 ‘더높이 더빨리’에서 강선(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옛 이름)의 붉은 노을을 체육용으로 새롭게 형상하게 된다”며 “새로운



대고조 시기에 강선에서 타오른 봉화를 체육적으로 형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 ‘강선의 봉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안남도 남포시)를 시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불러일으키면서 제시된 주민동원용 경제 구호임.

● **신종플루 정보책자 보급(8/1, 조선신보)**

- 북한 의과학원 의과학정보센터에서 ‘최근 전염병 자료’ 제목의 소책자를 발행해 신종 인플루엔자의 원인과 예방정보 등을 전문의 료기관들에 보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일 보도, 이 책자에는 신종플루 이외에도 말라리아, 홍역 등 전염병관련 자료도 함께 설명

● **문화부문, 김일성 우상화 작업 계속(8/1, 조선신보)**

- 조선국립교향악단은 “자기 얼굴이 뚜렷한 주곡”을 가지라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심히 지도해줘” 1956년 만들어진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주곡으로 편곡해 내놓았다고 조선신보가 1일 보도
- 신문은 “국립교향악단은 역사가 오랜 예술단체이지만 지난 시기에는 자기의 독자적인 주곡이 없었다”며 “교향악단은 ‘수령송가 작품’을 종자로 해 주곡을 창작하기로 했으며 결과적으로 ‘김정일 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선정됐다”고 설명, 이 노래의 관현악 편곡은 악단의 지휘자인 리철웅(36)씨가 맡았으며, 지난 6월말 첫선을 보임.
- 또 북한의 중앙미술창작사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인물들의 초상화 그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전우와 연고자들의 인물사진에 근거해 해마다 조선화 또는 유화로 초상 및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며 “회고록의 인물초상 및 미술작품은 국가미술심의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모두 국보로 등록돼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된다”고 설명
- 중앙미술창작사 최우철 부사장은 총 300여점으로 계획된 회고록의 인물초상 및 미술작품가운데 현재까지 210점이 완성됐고, 김 주석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과학기술 없이 자주권도 국방도 경제도 없다(7/22, 민주조선)**

- 북한 교육성의 김영인 부상은 29일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간 과학기술 경쟁을 지적하며 교육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과학화, 정보화”를 강조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학과목들을 개척”할 것을 주문했다고 민주조선이 보도
- 그는 특히 중등 일반교육 단계에선 우리말과 역사·지리, 기초과학과 외국어, 예·체능, 기초기술 등 일반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선 “전문분야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지금 나라들 사이에 과학기술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첨단



과학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낼 수 없고 국방력과 경제력도 강화할 수 없다”고 지적

● **北 평양서 리듬체조 국제심판 강습(7/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서 최근 ‘제12주기 국제 예술체조(리듬체조) 심판원 강습’이 열렸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5일 동안 진행된 강습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평양 시내 체육단 감독들,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국제체조연맹의 예술체조 1급 심판원인 타마라 봄파(캐나다)가 이론과 실기로 나눠 강습을 했다고 통신은 설명

● **北, 배우자 요건 ‘학력’ 가장 중시(7/17, 신민만보)**

-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민만보(新民晚報)는 27일 지난 5월과 이달 초 북한 관광을 다녀온 상하이 민간 관광객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젊은이들은 남녀 공히 배우자의 요건으로 학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대학 졸업 여부”라고 보도
-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의 통역이나 관광 안내원 등을 통해 들은 얘기를 이렇게 귀띠했다 “남성은 여성의 외모와 가정 상황을, 여성은 상대가 노동당원인지와 외모를 배우자 선택의 다음 조건으로 꼽았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제재관련

● **美, 유엔 대북 제재 대상 확대될 수도(7/31, 연합)**

-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힘.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을 이끄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은 30일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논의한 것 중 하나는 제재 대상 지정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추가로 제재 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고 언급
- 골드버그 조정관은 “미국은 제재 대상 추가에 관여할 것”이라며 미 당국이 미국의 은행들에게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엔 제재 대상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
- 골드버그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



응해 6월1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7월 16일 대북 제재위원을 통해 기존의 3개 북한 기업 외에 추가로 지정한 5개 기관과 5명의 개인에 더해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에 관한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

-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 그는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실행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결과물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 중국 언론은 28일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밀반입되려던 전략적 금속 물질인 바나듐 7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보도했었음.
- 한편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8월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측 외교·금융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

● EU,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對北 제재(7/28, 연합)

-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별개로 자체 대(對) 북한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대외관계 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공동입장’을 채택
-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월18~19일 회원국 정상들이 요구한 대로 오늘 이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전치(轉置)하는 ‘공동입장’을 채택했다”라고 밝힘.
- 27개국 정상들은 6월18~19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 (Presidency Conclusion)’에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언급, 이날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1874호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더불어 EU는 안보리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힘.
- 자체적 조치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 역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개인·기관 목록, 금융거래 감시 및 화물 검색 강화 등이라고 성명은 설명
- 이와 관련, EU 외교 소식통은 “오늘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입장’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의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

나. 북·미 관계

●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계속 평가(8/1, 연합)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도발행위와 관련, 북한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과거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해제하는 일은 법률적 과정”이라고 지적

- 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보도가 사실인지 확실치 않다”고 답변

● 美, 북미대화 6자들내 원칙 변화 없어(7/30, 연합)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우리의 대북 접근은 6자회담을 통해 다자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의 접근이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언급
- 그는 또 “우리는 양자 대화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왔고 그것은 6자회담과 다자회담의 맥락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
-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 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

● 美, 北핵신무역 제재 추가 지정(7/30, 연합)

-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의 ‘조선핵신무역회사’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과 개인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앞으로 조선핵신무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조선핵신무역은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됨.
- 조선핵신무역은 7월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었음. 안보리는 당시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선핵신무역이 WMD 개발에 연루돼 있다고 제재대상 지정 이유를 밝혔음. 미 재무부는 조선련봉총기업은 북한의 군수사업에 필요한 물자획득과 무기관련 수출을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



- **北, 여기자 협상명목 보즈워스 방북요구(7/30, 마이니치 신문)**
 - 북한과 중국 경계 지역에서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기자 석방을 위한 협상을 명목으로 7월 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북한 방문을 타진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서방 외교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측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기자들의 대우에 대한 협의를 평양에서 하자”고 미국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미국측은 “기사 석방 문제와 핵협상을 연계시키면 안된다”면서 우선 북한이 이들 기자를 석방하고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시하는 등 무조건 방북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양측간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언

- **北, 美에 잇단 양자회담 공세(7/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판문점, 조미협상탁(탁자)은 남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2007년 미국에 제의했던 북미 고위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관계자’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
 - 당시 북한은 판문점대표부 대표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북)·미 군부사이의 회담”을 제의했었음.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군이)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조선군대의 평화지향은 변함없다”고 ‘평화지향’을 강조하면서 북미 군사회담 제안의 유효성을 상기시킴.
 - 신문은 “미국은 조선이 취한 강경자세를 왜곡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식 논리는 조선이 그 무슨 외교적 효과를 타산하여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서 ‘군사적 모험’을 준비한다는 줄거리를 꾸미지만 여기엔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주북 中대사관서 연회 개최(7/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인민해방군 창건 82주년을 맞아 31일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장성들, 각국 대사와 무관들이 참석
- **北 영화·방송음악단 9월 베이징서 공연(7/30, 경화시보)**
 - 북한 영화·방송 음악단이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 현대식 극장인 세기극원(世紀劇院)에서 공연한다고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0일 보도

- 장명일 단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북한 영화·방송 음악단은 9월 4, 5일 이틀간 세기극원 무대에 올라 이 음악단의 대표 창작곡인 ‘꽃 파는 처녀’와 ‘피바다’ 등 북한 노래와 영화 삽입곡 등을 연주,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은 이 음악단은 영화문학창작사와 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 영화의 3대 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악 4만5천여 곡을 창작

● 中, 시진핑이 지원하던 대북사업 돌연 중단(7/30, 연합)

- 중국의 철강회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과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 돌연 관련 설비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29일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업에도 투자하는 ‘중광(重鑛)국제투자’는 이달 중순쯤 선양의 북방중공업(NHI)에 북한 헤산의 동광산(최대 추정 매장량 40만t) 개발을 위해 의뢰했던 설비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
- 중광은 2006년 11월 헤산 동광산을 개발하기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맺고, 이 광산에 투입할 채광 설비의 제작을 NHI에 의뢰, 그러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기업 명단에 올랐음.
- 중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 6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헤산 동광산 개발이 중국의 북한 투자 사업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뒤, NHI가 설비 공사를 서둘러 올 9월에는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이처럼 사업 막바지에 갑작스레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광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언급
- 중국은 지난 24일에도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이 밀반입하려던 전략적 금속인 바나듐(vanadium)을 압수한 바 있음. 중광 측은 갑작스런 중단 결정과 관련, NHI에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北, 6.25때 중국지원에 사의(7/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을 앞두고 26일 개최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6.25 전쟁 때 군사지원을 한 중국에 대한 사의 표명을 잊지 않았으나 종래보다 한결 열린 표현을 사용
-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27일 보도에 따르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중국 인민을 비롯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이 정의의 싸움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지지성원 하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언



제나 잊지 않고 있다”고 소개

라. 북·러 관계

● **주북 러 대사관, 농촌지원활동(7/29, 조선중앙통신)**

- 주북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29일 평안남도 천리마군 고창협동 농장에서 농촌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사관 관계자들은 콩밭 김매기 작업을 하고 준비한 지원물자를 전달

3. 대남정세

● **北, 개성통행자 개별서류 제출의무 면제(8/2, 연합)**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대체로 규제를 강화 해온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우리 측 통행자들의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됨. 2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남측 차량 운전자가 하게 돼 있는 이른바 ‘사진 명단’과 통행계획 제출 의무를 3일부터 없애기로 남측과 합의
- 대신 우리 측 공단 관리기관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당일 출입자의 사진명단과 통행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음.

● **남북, 군채널로 ‘연안호’ 입장 교환(7/31, 연합)**

- 남북은 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갔다가 북에 예인된 우리 측 어선 ‘800 연안호’ 처리 문제와 관련, 군사 실무 책임자 라인을 통해 공식 소통을 시작,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31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 “현재 연안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선원들과 연안호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이 전통문을 보내온 것과 같은 경로로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재차 촉구
- 정부는 우리 측 동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북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7월30일 우리 측 어선 연안호의 북방 한계선 월선은 항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히 선박과 선원을 송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
- 이에 따라 남북은 향후 양측 군사실무책임자 채널을 통해 사건 처리 문제를 협의하게 될 전망, 29t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 ‘800 연안호’는 30일 오전 5시5분께 강원도 제진(옛 저진) 동북쪽 37km 상의 동해 NLL을 13km가량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 1척에 의해 장전함으로 예인됨.



● 8월 초, 민간대북지원사업 기금지원 의결(7/31, 연합)

- 정부는 내주 초 10여개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3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유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회의를 최근 개최, 10여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매칭펀드(단체가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서 지원)’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35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 이에 따라 통일부는 31일 국회에 지원 계획을 보고했으며 내주 초인 8월3~4일 즈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서명 절차를 끝으로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기금 지원이 최종 의결될 경우 비록 민간을 통한 간접지원이긴 하지만 지난 4~5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보류했던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의미가 있음. 기금 지원 대상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성 사업이 주를 이룬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

● 개정 ‘남북교류협력법’ 내일 발효(7/30, 연합)

- 남북교류협력 사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31일 발효,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에 의해 최장 1년의 수시 방문 기간을 보장받은 남북협력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음.
- 또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에 참석해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 그리고 당국 간 합의에 따른 행사나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아울러 개성공단 등 특구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총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됨.
- 새 법률은 이와 함께 ‘행정조사제도’를 도입,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음.
-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지난 1월 개정된 이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침.

● 월드비전, 핵실험 후 첫 방북(7/30, 연합)

- 대북 지원단체인 월드비전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민간 지원단체로는 처음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8월 1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월드비전 관계자는 30일 “북측 민경련으로부터 이미 초청장도 받아



- 왔고 통일부로부터도 구두 승인을 얻어 놓았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일 중국 선양으로 갔다가 방북길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
- 이번 월드비전 방북단은 씨감자 농사 지원사업 자문위원 7명으로 구성돼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씨감자 대단위 사업장인 량강도 대흥단 등지를 둘러볼 계획

● 北, 동해NLL 월선 南어선 장전항 예인(7/30, 연합)

- 통일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29t급 오징어 채낚기어선 ‘800연안호(선장 박광선)’는 이날 오전 5시5분쯤 강원도 제진 북동쪽 36.4km 상의 동해 NLL을 12.7km가량 넘어감. 군 관계자는 “당시 어선 통신망을 통해 호출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연안호는 선체가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소형이어서 월선(越線) 전 이 배와 54.6km 거리에서 경비 중이던 우리 초계함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군은 언급
- 이후 북한 수역으로 들어간 연안호는 오전 6시20분쯤 속초 어업정보 통신국에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복귀 향해 중 북한 경비정을 발견했다”고 교신, 선장 박씨는 “북한 배에서 조사받는다”고 짤막하게 마지막 교신을 남긴 것으로 알려짐. 해군은 오전 6시27분쯤 연안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는 모습을 포착했고, 6시30분쯤 고속정 2척을 긴급 출동시킴.
- 우리측은 6시44분쯤 상선 공통망을 통해 북한 경비정에 “우리 어선이 항로를 이탈해 귀측으로 넘어갔다. 즉시 남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 통신한 데 이어, 7시16분쯤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난 6월 30일과 7월 5일 귀측 어선을 돌려보냈다. 귀측도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기 바란다”고 재차 통신했지만 북측은 모두 응답하지 않음.

● 정부,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7/27, 연합)

- 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마련, 안보리에 제출
- 정부 당국자는 “국가이행보고서는 결의 1718호와 마찬가지로 결의 1874호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무기 및 물품 금수와 화물·선박검색, 금융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그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밝힘.
-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북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관련 제재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힘.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약산총무역회사 간부임.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은 남천강 무역, 조선 원자력 총국, 홍콩 일레트로닉스, 조선혁신 무역회사, 조선 단군무역회사임.



-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국민이나 기업, 단체가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 6자수석 ‘하와이 회동’ 주목(8/2)

- 미국 하와이에서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에 북핵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양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이번 회동에서 특정한 의제설정 없이 자유토론 형식의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토론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기류 속에서 한·미 양국의 6자회담 사령탑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사태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게 중론임. 특히 같은 기간 보즈워스 특별대표 역시 위 본부장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하와이 회동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음. 위 본부장과 보즈워스 대표는 지난 6월 초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회동한데 이어 2개월만에 재회하게 됨. 이번 회동은 당장 북핵 해법에 대한 ‘답’을 찾기 보다는 북핵 대응방향에 대한 ‘주파수’를 조율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등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게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임.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당장 이른 시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고 서로의 생각을 정리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 최근 북핵 해법의 유력한 카드로 등장한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서는 다소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포괄적 패키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북한이 협상태이블에 돌아왔을 때를 상정한 협의일 뿐”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음. 고위 외교소식통 역시 “포괄적 패키지에 담겨질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는 대부분 9.19 공동성명이 다루고 있다”면서 “다만 추후 협상에 대비해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거나 확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美 “유엔 대북 제재 대상 확대될수도”(7/31)

-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을 이끄는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은 30일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논의한 것 중 하나는 제재 대상 지정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추가로 제재 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골드버그 조정관은 “미국은 제재 대상 추가에 관여할 것”이라며 미 당국이 미국의 은행들에게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엔 제재 대상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 골드버그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6월1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이달 16일 대북 제재위를 통해 기존의 3개 북한 기업 외에 추가로 지정한 5개 기관과 5명의 개인에 더해 자산동결·여행제한 등에 관한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임.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그는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실행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었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결과물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언론은 28일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밀반입되려던 전략적 금속 물질인 바나듐 7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보도했었음.

● 美 “북미대화 6자틀내 원칙 변화없어”(7/31)

- 미국 국무부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틀안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우리의 대북 접근은 6자회담을 통해 다자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의 접근이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우리는 양자 대화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왔고 그것은 6자회담과 다자회담의 맥락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거부했음.
- 그는 “북한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는 수단이 있지만 이러한 대화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에 관여하지는 않



는다”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 성 김 수석대표의 북한측과의 만남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억류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수석대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美 대북제재팀 러시아·아시아 방문(7/30)

-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이 내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미 국무부 관계자는 29일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 전담반이 다음달 3일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측 외교·금융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골드버그 조정관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뉴욕도 방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구체적인 제재이행 방안 등과 관련해 협의를 가질 예정임. 국무부 관계자는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이 다음달 중순께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행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이미 이달 초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협의한 바 있음. 또 이와 별도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텐턴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도 대북 금융제재 논의를 위해 이달 초 중국과 홍콩을 방문했음.

● 中, 美에 북한의 안보우려 수용 촉구(7/29)

- 중국은 28일 만약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괄 타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수용할 경우 북한은 기꺼이 새로운 군축합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수석 부부장은 이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가지려는 미국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강조함.
- 그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검토 중인 일괄타결안과 관련해 “만약 (일괄타결안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수용한다면 이는 북한 측에 매력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왕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이 지난 6년간 6자회담 틀 안에서 훌륭한 협력을 유지해왔으나 불행히도 북한이 최근 두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서 중국과 미국 양국은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함. 왕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이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함.



- 그는 또 양국은 유엔의 제재결의가 진지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핵문제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힘. 왕 부부장은 그러나 유엔의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이나 인도주의적 명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맹백히하고 있다면서 제재이행은 진지하고 책임감있게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중국과 미국이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해 추가적인 접촉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지역 일부' 정세가 통제 불능상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자신이 노련한 대북 협상가인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가졌다면 논의를 매우 유익했다고 전함. 중국은 북한의 가까운 맹방으로 그동안 6자 회담을 주최해왔으나 미국내 보수파로부터 북한을 충분히 견제하지 않고있다는 비난을 받아옴.

● “北 과소평가 금물..붕괴조짐 없다”(7/28)

- 주평(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8일 “북한은 생존법을 잘 터득한터라 어려운 상황을 잘 이용해가면서 견뎌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된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0년 생존하는 등 정권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오후 서초구 서초동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대회의실에서 국제교류재단-세종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 주제하의 강연에서 이렇게 내다봄.
- 주 교수는 “경제문제를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인도적인 고려에 입각해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며 “다만, 대화는 하되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북한의 6자회담 불참에 대해서는 “6자회담은 국제간 다자협약인 만큼 북한이 무조건 참여해야한다”고 밝힘. 그는 북한의 대미 직접대화 추진 배경에 대해 “양자회담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고립과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 뒤 “2차 핵실험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예상돼왔다”고 말함. 또 “북한은 ‘여기자 2명 억류’ 사건을 미국과 담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함.
- 주 교수는 “제2차 핵실험은 주변국과 세계평화에 매우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한 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이 같은 대화의 틀을 지키고 주변 국가간 단결을 강화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당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핵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들의 정책이 어떤 전환적인 변화(轉變)를 가져올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음. 주 교수는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공조 입장을 보여온 것에 대해 “중국은 한·미·일 등 주변국가와 관



점이 비슷하다”며 “다만 대북제재의 정도나 방법 여하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더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 그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강조함. 그는 “1차 핵실험 후 특사를 보내 우리의 (‘비핵화’)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2차 핵실험을 진행한 만큼 앞으로 북한이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또 우리도 그들을 과거처럼 잘 설득시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계속 평가”(8/1)

- 미국 국무부는 3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아직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도발행위와 관련, 북한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과거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해제하는 일은 법률적 과정”이라고 지적했음. 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크롤리 차관보는 또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보도가 사실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음. 그러나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도발행위들을 그만둔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음.

● 美하원, 대북제재법안 발의(8/1)

- 미 하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독자제재를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음. 1일 미 하원에 따르면 마이클 맥마흔(민주)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2009 북한제재법’을 외교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지난달 30일 발의했음. 이 법안은 밥 잉글리스(공화) 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 됐음.
- 무기수출통제법은 핵 폭파장치를 사용하거나 확산하는 나라들에 군수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국과의 신용거래와 지급보증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을 금지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차관 제공도 반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美, 北핵신무역 금융제재 추가대상 지정(7/31)**

 -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의 '조선핵신무역회사'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했음.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과 개인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앞으로 조선핵신무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조선핵신무역은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됨.
 - 조선핵신무역은 지난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됐음. 안보리는 당시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선핵신무역이 WMD 개발에 연루돼 있다고 제재대상 지정 이유를 밝혔음.
 - 재무부는 조선련봉총기업은 북한의 군수사업에 필요한 물자획득과 무기관련 수출을 지원하는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전했음.
 -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애덤 J. 수빈 실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프로그램과 연계된 조직이나 기관들에 대해 거래금지와 더불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기관들을 확인해 제재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北, 여기자 협상명목 보즈워스 방북요구”(7/30)**

 - 북한과 중국 경계 지역에서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기자 석방을 위한 협상을 명목으로 이달 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북한 방문을 타진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서방 외교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북한측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기자들의 대우에 대한 협의를 평양에서 하자”고 미국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미국측은 “기사 석방 문제와 핵협상을 연계시키면 안된다”면서 우선 북한이 이들 기자를 석방하고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시하는 등 무조건 방북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양측간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美 “북미대화 6자틀내 원칙 변화없어”(7/31)**

 - 미국 국무부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틀안에서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30일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우리의 대북 접근은 6자회담을 통해 다자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리의 접근이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의 입장이



기도 하다”고 말함.

- 그는 또 “우리는 양자 대화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왔고 그것은 6자회담과 다자회담의 맥락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함.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 협의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방북을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함.
- 그는 “북한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는 수단이 있지만 이러한 대화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 성 김 수석대표의 북한측과의 만남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억류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수석대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이와 함께 켈리 대변인은 억류 여기자들과 개성공단에 억류중인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연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 美, 北 핵신무역 금융제재 추가대상 지정(7/31)

-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의 ‘조선핵신무역회사’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함.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과 개인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앞으로 조선핵신무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조선핵신무역은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됨. 조선핵신무역은 지난 16일 유엔안보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됨. 안보리는 당시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선핵신무역이 WMD 개발에 연루돼 있다고 제재대상 지정 이유를 밝힘. 재무부는 조선련봉총기업은 북한의 군수사업에 필요한 물자획득과 무기관련 수출을 지원하는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전함.
-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애덤 J. 수빈 실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프로그램과 연계된 조직이나 기관들에 대해 거래금지와 더불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기관들을 확인해 제재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북한무역회사인 남춘강(NCG)에 대해 우라늄 농축 장비구매에 관여했다며 미국내 자산동결 조치와 함께 미국 기업과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함. 재무부도 같은 날 이와는 별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의 남부 키시섬



에 있는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北, 여기자 협상명목 보즈워스 방북요구”(7/30)

- 북한과 중국 경계 지역에서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기자 석방을 위한 협상을 명목으로 이달 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의 북한 방문을 타진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서방 외교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북한측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기자들의 대우에 대한 협의를 평양에서 하자”고 미국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미국측은 “기사 석방 문제와 핵협상을 연계시키면 안된다”면서 우선 북한이 이들 기자를 석방하고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시하는 등 무조건 방북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양측간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潘총장 “북·미 직접 대화 지지”(7/30)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반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측이 북·미 양자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측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만 대화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특히 그는 “6자 회담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위해 여전히 좋고 유효한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당국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반 총장의 한 측근은 “6자 회담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모든 대화 창구가 차단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북·미 회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함.
- 반 총장은 “지금까지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으며, 여기에는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함. 반 총장은 이어 “언제쯤이 적절한 방북 시점일 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렵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2명의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에 인도적 견지에서 두 여기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경로는 밝히지 않았음.



● 美 “北과 양자대화 6자 틀내서만 가능”(7/28)

-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이 미국과 양자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양국간 대화는 다자회담의 틀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 사실상 북한의 제의를 거절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그것은 6자회담과 다자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밝힘. 켈리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 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없이 그들과의 만남 약속만으로 북한에 보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2005년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그들은 그러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함. 그는 “그들이 그러한 행동에 나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면 우리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한 틀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양자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구체적 조치와 약속 이행”이라면서 “그들이 그것을 시작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대화에 합의한다면 그때 앞으로의 진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지금은 그런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켈리 대변인은 또 이번 양자회담 제의를 놓고 북한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에 질문에는 외교적 문제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 그는 “우리는 북한과 비공식이나 공식 또는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과 하거나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외교적인 대화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AFP통신에 북한의 대화 제의는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참여 국가와의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함.
- 이 당국자는 전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와 관련, “우리는 6자회담의 틀이 있고, 북한은 이 틀을 통해 비핵화를 재약속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담화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라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fails to meet)”고 지적함.

● 클린턴 “北 반쪽조치엔 보상못해”(7/27)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협상 복귀를 희망하지만 ‘반쪽조치’에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노력인 협상에 복귀하길 여전히 희망한다”면서도 협상에 복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또 중국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압력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 있다고 지적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뒤 지난 주말 귀국한 클린턴 장관은 “아세안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나와 같은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그는 과거 수십년전 북한에서 잘못된 일까지 미국에 뒤집어 씌우며 공격을 가했다”면서 “나는 듣고만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북한 대표를 바라보지조차 않았다”고 전함.

- 클린턴 장관은 특히 “나는 북한 대표의 ‘보디 랭귀지’에 놀랐다”고 말하면서 “이제 북한에는 친구가 없으며, 심지어 (북한과 가까운) 버마(미얀마를 지칭하는 미국 표현)도 제재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강조함. 이어 그는 북한의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군사전문가 등의 말을 빌려 미국에는 실재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자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는 위협이 된다”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 문제는 핵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들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함. 그는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조치를 사실상 매일 강구하고 있다”면서 억류중인 여기자들은 북한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음.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은 이란에 대해 어떤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도 성과가 없는 헛된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누구이든 위협 목적이나 권력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이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함.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이란 대화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암묵적인 요청임.

다. 중·북 관계

● 北 영화·방송음악단 9월 베이징서 공연(7/30)

- 북한 영화·방송 음악단이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 현대식 극장인 세기극원(世紀劇院)에서 공연한다고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0일 보도했음. 장명일 단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북한 영화·방송 음악단은 9월 4, 5일 이틀간 세기극원 무대에 올라 이 음악단의 대표 창작곡인 ‘꽃 파는 처녀’와 ‘피바다’ 등 북한 노래와 영화 삽입곡 등을 연주함.
-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은 이 음악단은 영화문화창작사와 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 영화의 3대 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악 4만5천여곡을 창작했음.



● 中, 유엔 제재 北기업과 사업중단할 듯(7/29)

- 중국의 철강그룹이 북한의 동(銅)광산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의뢰한 설비 제조를 완공을 앞두고 돌연 중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9일 복수의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철강업체인 중광(重鑛)그룹이 이달 초 선양 북방중공업(NHI)에 북한 해산의 동광산 개발을 위해 의뢰한 설비 제조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
- 중광은 2006년 11월 해산 동광산을 개발키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해산 동광산에 투입할 채광 설비의 제작을 NHI에 의뢰했었음.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지난 4월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리스트에 오른 업체임. 중광은 당초 올 9월께 설비를 완공, 해산 동광산에 투입한 뒤 본격적인 채광에 나설 계획이었음. '북중 우의 60주년'을 맞아 중국의 최고위직도 채광 개시 시점에 맞춰 해산에서 테이프 커팅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미 설비 제조가 막바지 단계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제조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중광 측은 NHI에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만 통보했다고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 압록강변에 위치한 해산 동광산은 최대 40만t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최대 구리 광산 가운데 하나지만 갭 내에 물이 차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채굴을 중단해왔음.

● 고립된 北, 믿을 곳은 중국..무역 급증(7/30)

- 핵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올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3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다둥(大東)항세관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은 71만8천t(무역액 9천617만6천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1.9% 증가(무역액 268.4% 증가)함.
-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입 화물은 70만1천t(6천716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78%(무역액 306.1%) 증가했으며 대북 수출 화물은 1만7천t(무역액 2천901만6천 달러)으로 550%(무역액 206%) 늘었음. 북한에서 반입된 상품은 무연탄과 철강재가 주종을 이뤘음. 무연탄 수입액이 4천622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8.5%를 차지했으며 철강재가 598만9천 달러(8.9%)로 뒤를 이음. 대북 수출품은 기계류가 1천436만9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200% 폭증했고 옥수수과 쌀 등 농산품도 1천144만2천 달러를 기록, 40.2% 증가함.
- 중국 개인기업의 무역액이 8천572만2천 달러로 330% 증가하면서 전체 대북 무역의 97%를 차지했으며 국유기업 무역액도 749만3천



달러로 1천% 급증함.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단둥은 대북 무역 물량 80%를 소화하고 있어 북·중간 무역 추이를 파악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음.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데다 올해 들어 핵 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주요 무역국이었던 한국·일본과의 거래가 위축됐고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中, 北 밀반입 미사일 부품 원료 압수(7/28)

-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밀반입되려던 전략적 금속 물질인 바나듐 70kg을 적발, 전량 압수함. 28일 단둥일보(丹東日報)에 따르면 단둥세관은 24일 북한 수출 수송 차량에 대한 검색 과정에서 과일 상자로 위장한 6박스의 바나듐을 적발해 압수함. 적발된 바나듐은 68개의 작은 병에 담겨져 과일로 위장돼 있었으며 시가 20만 위안(3천600여만원) 상당이었음.
- 항마모, 항고온 등의 특성을 지닌 금속 바나듐은 비행기나 미사일 부품 제조 등에 필수적인 첨가 원료로 쓰임. 중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바나듐을 비롯한 전략 금속 물질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옴.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 북한 군수품의 밀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도 군수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전략 품목의 대북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기타

● “미얀마, 北 도움으로 핵무기 제조”<濠紙>(7/31)

- 미얀마 군사정권이 북한의 도움으로 앞으로 5년 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고 비밀리에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현지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일 보도. 이는 호주국립대(ANU) 전략문제 연구학자 데스몬드 볼 교수와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 출신 호주인 언론인 필 소튼이 지난 2년 동안 태국에서 2명의 미얀마 망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망명자 가운데 1명은 미얀마군 비밀 핵 부대 장교로 러시아에서 핵 관련 훈련을 받았으며 또 다른 1명은 러시아와 북한의 핵 관련 계약문제를 다루는 기업의 전직 최고경영자(CEO)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음.
- 이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북부 라웅나잉 산악지역에 동굴을 뚫어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문제의 비밀 핵시설은 러시아가 다른 곳에 짓는 상업용 원자로와 나란히 건설되고 있다는 것. 러시아와 미얀마는 상업용 원자로 완공 후 이를 국제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北 첫 패스트푸드점, 지점 개설계획 밝혀(7/30)

- 북한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평양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며 조만간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삼태성의 지배인이 30일 밝혔다.
- 삼태성의 고종욱 지배인은 이날 APTN과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연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음식점은 시민들 및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차 (평양) 시내 여러 곳에 분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 지배인은 또 “우리 음식점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음식을 전문으로 한다”면서 삼태성이 세계 유수의 패스트푸드점과 다른 없는 곳을 강조했다.
- APTN 보도에 따르면 삼태성의 직원들은 오렌지색 앞치마와 흰색 위생모를 쓰고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으며, 손님 중에는 북한 시민으로 보이는 이도 몇몇 있었으나 식당 내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였음.

● 어선 1척, 동해서 NLL 월선..北 예인(7/30)

- 남한 어선 1척이 30일 오전 6시 27분께 강원도 제진 동북쪽 20마일 상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7마일 가량 넘어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고 있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29t급 오징어 채낚이어선 ‘800 연안호’(선장 곽모씨)가 동해 NLL을 넘어 북한 수역으로 진입해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 쪽으로 예인되고 있는 중”이라며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어선은 전날 오후 1시 30분 강원도 거진항을 출항해 레이더 탐지 밖의 동해 먼 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가 항로를 이탈, 북한 수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경비정 1척에 의해 예인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함정에 대해 “우리 어선이 항로를 이탈해 귀측으로 넘어갔다. 즉각 남하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우리도 서해 상에서 6월 30일과 7월 5일 귀측 어선을 돌려보냈다. 귀측도 우리 어선을 돌려보내길 바란다”라고 무선통신을 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어선에 선원 4~5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에 장착된 ‘해양 프로타’(GPS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긴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EU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對北 제재”(7/28)

-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별개로 자체 대(對) 북한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대외관계 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공동입장’ 을 채택함.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18~19일 회원국 정상들이 요구한 대로 오늘 이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전치(轉置)하는 ‘공동입장’ 을 채택했다”라고 밝힘.

- 27개국 정상들은 6월18~19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 (Presidency Conclusion)’ 에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었음. 당시 의장국 결론은 “가장 최근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발사 등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강력히 비난함.
- 이날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1874호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더불어 EU는 안보리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힘. 자체적 조치는 대북 수출금지 품목, 역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개인·기관 목록, 금융거래 감시 및 화물 검색 강화 등이라고 성명은 설명함. 이와 관련, EU 외교 소식통은 “오늘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입장’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의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함.

● 정부, 北 개인·기업에 금융제재(7/27)

- 정부가 북한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사상 두 번째 금융제재에 들어감.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북한 기업,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관련 제재를 29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힘.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조선원자력 총국장, 황석화 조선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약산총무역회사 간부임.
-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은 남천강 무역, 조선 원자력 총국, 홍콩 일레트로닉스, 조선혁신 무역회사, 조선 단군무역회사임. 이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확산 금융거래 및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으나, 남측과는 거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음.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대상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됨. 또 지난 4월 단천 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조치에 이어 이번에 5개가 추가됨으로써 모두 8개 북한 기업 및 기관이 제재를 받게 됨.
- 이들 제재 대상 가운데 리제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은 북한 핵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로 영변원자력 연구소 및 남천강 무역회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는 원자력 총국의 과학지도부 책임자로 핵연구기관 연합체의 과학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남천강 무역회사는 원자력총국 산하 기업으로 핵 관련



장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홍콩일렉트로닉스는 이란 소재 북한 기업으로 조선광업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을 대리해 WMD와 관련한 자금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조선련봉총회사의 자회사며,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 제2과학위원회 산하 무역회사로 방산물자·기술 조달을 담당하고 있음.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결의 제1874호를 의결, 회원국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 및 WMD 확산에 관한 북한 인사 5명과 5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지난 16일 한국 정부가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북한 인사와 기업 및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우리 국민·기업·단체 등과 제재대상자 간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할 계획임.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대상 북한 인사와 기업들이 남측과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향후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USTR, 한·미FTA 의견수렴 착수(7/28)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27일자로 관보에 게재한 ‘한·미FTA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9월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어서 2년 넘게 끌고있는 양국 의회의 FTA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음.
- USTR는 이날 관보에서 FTA 이행시 상품과 서비스 등 양국 교역에 미칠 영향, 관세·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 소비자에게 가져올 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밝힘. 또 한·미FTA는 물론 양국 무역 및 투자관계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제안함. USTR는 지난주 외교부를 통해 FTA 의견수렴을 위해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 의회 비준을 위해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FTA 비준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이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계를 비롯해 FTA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많이 표출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출됨으로써 연내에 비준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실제로 한·미FTA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미재계연합도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USTR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2007년 6월 FTA 협상이 타결된 후 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행정부와 의회 등에 제출한 바 있음. 하지만 협상 타결 이후 자동차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한·미FTA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논란이 빚어졌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미 의회 비준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함.

● <美조기계양, 한·미동맹 현주소 확인> (7/27)

- 미국이 한국전 종전일을 기념해 27일 주요 연방정부 건물 등에 일제히 성조기 조기를 게양한 것은 한·미간의 두텁고 긴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사건임. 이번 미국의 조기계양은 일회성 또는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와 마찬가지로 조기를 달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음. 한마디로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제도화한 것임.
- 특히 미국이 특정한 개별전쟁을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조기를 다는 기념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이 아닌 ‘살아있는 전쟁’으로 미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역사적 의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4일 발표한 포고문에 그대로 담겨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56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인이 이날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고 감사하는 적절한 기념식과 활동을 하는 날로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
- 여기에다 지난해 미대선 당시부터 각종 전쟁 참전용사(베테랑)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보훈정책도 한국전 종전일을 기념하는 이번 성조기 조기계양 실현에 일조했다는 지적임. 오바마 대통령은 전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과 한국전은 물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참전한 용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옴.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돌아온 뒤 조국에서 냉대를 받아서야 되겠냐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논리임.

- 지난 2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 전선에 투입됐던 필리핀인 참전용사 1만8천여명에게 총 1억9천800만달러의 보상금을 경기부양자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크게 봐서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에서 고생했던 베테랑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이뤄진 것임. 이들 필리핀인 용사들은 당시 정글에서 미군의 지휘 아래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됐으며,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60여년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이들 가운데는 현재는 미국시민이 된 베테랑도 다수 포함돼 있음.
-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차례 발의된 끝에 빛을 보게된 데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한몫을 함. 주한 미대사관은 지난 5월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한국전쟁 알리기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존 워너(82) 전 의원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함. 당시 워너 전 의원은 “나의 전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나 그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며, 한국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는데 보탬이 됐다”며 오늘날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지켜내는데 일조했다는 자긍심을 드러냄.
- 또 지난해 한국의 대외무기판매지위(FMS)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나,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 연방하원이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및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이번 조기계양이 결실을 보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임. 미군은 한국전쟁에서 3년여 동안 5만4천246명이 전사하고 8천176명 이상이 전쟁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됨.

나. 미·중 관계

● 中, 위구르사태 美 반응에 사의(7/29)

-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수석 부부장은 28일 미국이 이달 초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 ‘절제된 태도’를 보인 데 감사하고 있다고 밝힘.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유혈 시위를 “매우 폭력적인 테러리스트들이 구타와 방화 등을 저지른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함. 왕 부부장은 이어 미국 관리들이 미국은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중국의 내정 문제로 인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함.
- 그는 또 중국이 미국 측에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분리주의자들의 반중 시위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이날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신장 위구르 사태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신장 위구르 사태를 포함, 인권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인권문제는 분명 회담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언급은 피함. 클린턴 장관은 앞서 신장 위구르 사태 발생 이틀만인 지난 7일에는 “신장 위구르 사태의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평을 내놓은 바 있음.

● <美中대화 장식한 中 고사성어>(7/29)

- 중국의 화려한 고사성어가 27~28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전략경제대화를 장식함.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성어를 인용한 주체가 중국 측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장관들이었다는 점에 있음. 홍콩 문화보 등 중화권 언론들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이 연설과 발표 등에서 성어를 직접 인용했다고 보도하면서 크게 주목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맹자가 한 말을 인용, “산중에 난 좁은 길도 계속 다니면 곧 길이 되고, 다니지 않으면 곧 풀이 우거져 길이 막힌다(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則茅塞之矣)”라고 말하며 양국간 지속적인 대화와 끊임없는 협력을 역설했음. 그가 인용한 문장은 맹자의 진심(盡心) 하편에 나옴. 그는 또 농구스타 야오밍(姚明)을 언급하면서 “야오밍이 ‘새 멤버든 오래된 멤버든 서로 맞춰나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대화에서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가 그의 기준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친근감을 드러냄.
- 문화보는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오밍과 맹자를 직접 인용해 연설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친밀감을 심어줬다”고 높이 평가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人心齊, 泰山移)는 중국 속담을 인용, “미국과 중국은 벽돌을 쌓듯이 굳건한 관계를 맺어 국제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함.
-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風雨同舟·오월동주와 같은 뜻)라면서 금융위기 등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2월 방중 당시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란 표현을 사용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음.
- 중국도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려운 고사성어를 인용한 미국 측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화답함.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전략경제대화 기간 가진 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 있겠느냐”고 자문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예스 위 캔(Yes we can)’으로 답변해 큰 호응을 얻었음.



● 美·中 군사대화 1-2개월내 재개(7/29)

- 미국과 중국은 1~2개월 내에 고위급 군사대화를 재개, 정치·경제 분야와 함께 군사분야에서 G2(주요 2개국)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은 28일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 결과를 이같이 전함. 키팅 사령관은 “이런(군사)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고위급 군사 방문이 있었으며, (대화 재개를 위한) 마지막 계획 단계에 있다”고 밝힘.
- 그는 “이런 대화들은 1개월 또는 2개월 내에 아마 재개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신뢰와 상호 존중의 기반을 계속 쌓고 싶다”면서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중국 인민해방군 대표와의 회의에서도 군사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함. 한편 키팅 사령관은 회견에서 미군의 추적을 받은 끝에 북한으로 회항한 강남1호 문제와 관련, 회항하는 과정까지 중국의 도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나 중국의 어떤 당국자와도 그 작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군사분야에서 직접 협의는 없었음을 시사함. 그는 “우리는 그 북한 선박의 위치를 출발 전부터 다시 회항할 때까지 파악했지만 중국이 우리 정도로 위치를 알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함.
- 그는 또 2012년으로 예정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와 관련, 이양 시기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동맹 사이에 논의하지 못할 것은 결코 없지만, 우리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다른 진지한 협의는 알지 못한다”고 답함. 이 밖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주일미군 증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미·일간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주둔중인 군대의 어떤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 美, 中에 내수위주 성장전략 주문(7/28)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7일 중국에 대해 수출 주도 경제성장전략을 내수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경제성장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함.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가계 소비확대를 포함한 중국의 성공적인 내수 위주 경제성장 구조 전환은 국제경제가 더 빠르게 그리고 균형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그는 경제침체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소비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더 받쳐나갈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경제의 균형이 있는 성장을 위해 중국이 수출을 줄이고 국내의 소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은 미·중 경제관계에서 최대 현안인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는 이날 거론하지 않았음.

- 가이트너 장관은 또 미국은 앞으로 4년 동안 재정적자를 줄이고 개인저축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2013년까지 개인저축을 더 크게 늘리고 연방 재정적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와 관련, 개막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은 좀 더 저축하고 중국인들은 더 많이 소비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을 좀 더 지속 가능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투자와 수출에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중국도 미국의 상품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경제회복은 미국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왕 부총리는 미·중 양국은 경제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국제금융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北.이란 핵해결에 中협력 기대”(7/2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개막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 확산방지에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힘. 그는 “미국과 중국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함.
- 그는 핵무기에 접근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북한과 이란을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로 직접 지목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그들이 의무를 준수하면 안보와 존경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고 이란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데도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현실에 반드시 기초해야 한다면서 미·중 양자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이며 21세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 관계는 세계의 어느 양자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우리 관계는 반드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외교와 세계전략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임. 미국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중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옴. 이러한 표현은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의 우려를 살 수 있기 때문임.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모든 현안에 대해 합의를 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중요성도 이번 개막연설에서 강조됨.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위기는 미국 안에서 이뤄지는 결정이 전 세계경제로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이것은 뉴욕이나 시애틀뿐만 아니라 상하이, 선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것이 바로 강력한 양자와 대자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라고 설명함.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문제와 관련, 모든 사람의 종교와 문화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함. 그는 “그것은 미국의 소수민족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의 종교나 인종적인 소수민족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함.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중 양국은 경제위기에서부터 핵무기 비확산,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염병, 국제빈곤,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 이르는 공통된 국제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공통된 이해기반을 모색하고 공통의 목적 아래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또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경제위기 극복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논의되고 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대한 관심사였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인 긴장과 군비가속화 위협을 다함께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중국 정부가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에 고마움을 갖고 있다”고 말함.

다. 미·일 관계

● “미일 핵우산 정기협의 내달 후반 이후 개시”(8/2)

-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억지력 운용 방안과 관련한 양국간 정기협의 첫 회의가 내달 중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측은 당초 오는 30일 총선 이전이라도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의원 선거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의 차기 정권의 기반이 확립된 이후로 이를 미루기로 했음.



- 양국 간 핵우산을 포함한 억지력 운용 방안 관련 정기 회담은 지난 18일 양국 외교, 국방담당 국장급 간부가 참가한 가운데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 고위급 사무레벨 협의에서 합의했음.
- 당시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정기협회는 당초 실무급 레벨을 상정했지만, 중의원 선거 이후의 정권 향배에 따라서는 더욱 높은 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지아는 지적했음.

라. 미·러 관계

● <美 부통령의 러시아 비판..위협 수준>(7/27)

-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러시아 비판 발언이 계속되면서 오랜 만에 찾아온 미국과 러시아 간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지난주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연쇄 방문 길에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이든 부통령이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또 한 번 러시아에 일격을 가함. 바이든은 “러시아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도 쇠퇴하고 있다. 은행부문은 앞으로 15년을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도부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비난함.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별로 힘이 없으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함.
- 그는 또 양국이 진행 중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과 관련, “그들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더는 이웃들을 위협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을까? 아니다. 경제 위기로 그것(핵무기)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함. ‘말실수 기계’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불과 3주 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게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임.
- 전 부시 정권에서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양국 지도자들이 애쓰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임. 앞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방문에서 두 나라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등 그루지야 내 두 자치공화국 문제를 꺼내 러시아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기도 함. 크렘린은 이번 WSJ 인터뷰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
-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대통령 대외정책보좌관은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미국의 외교 정책을 누가 맡고 있는지 궁금하다. 팀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로서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음. 러시아의 이런 반응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섬.



- 클린턴 장관은 26일 미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러시아 측의 오해를 의식한 듯 "미국은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생각하며 러시아를 존중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관계 재설정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당일 성명에서 바이든 발언의 진위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의식한 듯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믿고 있으며 지난 모스크바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 핵 위협 등 많은 공동의 도전 앞에서 효율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

마. 중·일 관계

● <中·日관계, 카디르 訪日로 급랭조짐>(7/29)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위구르 독립운동의 '대모(代母)' 레비아 카디르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국의 만류와 강한 반대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레비아 카디르의 방문을 허용했기 때문임. 세계위구르회의(WUC) 의장인 레비아 카디르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28일 도쿄에 도착, 3일간의 방문 일정에 들어감.
- 카디르를 이달 초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신장(新疆)위구르 사태의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일본 당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함.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추이텐(崔天凱) 주일 중국대사는 평항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중일관계를 훼손하는 어떤 상황도 허락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은 카디르의 방일이 이미 양국관계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침. 중국 정부의 잇따른 강경 입장 발표는 중국이 실제로 일본에 보복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음.
- 중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와 소수민족 분리독립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해 옴.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新疆) 자치구의 분리독립 문제와 대만 문제 등 자국의 안위와 존립이 걸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절박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온 것임. 중국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프랑스에 보복을 가함. 작년 12월 당시 유럽연합 순회의장(EU)이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EU와의 정상회담을 연기했고 지난 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유럽 순방 당시 순방지에서 프랑스를 제외해버림.
- 또 독일 역시 비슷한 보복을 당함. 재작년 9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 티베트의 문화적 자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독일과의 고위급 정치 회담과 문화 행사들을 잇따라 취



소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함. 또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행위라고 반발하며 미국과의 군사대화를 포함한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함.

바. 중·러 관계

● 中-러, 합동군사훈련 정식 돌입(7/22)

- 중국과 러시아는 22일 러시아 극동지방에 있는 하바로프스크에서 5일간의 반테러 합동군사훈련에 정식 돌입함. ‘평화사명 2009’로 명명된 이번 합동훈련은 지난 19일 준비 과정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폭기 한대가 추락했음에도 예정대로 강행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 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주변 국가들의 반테러상황에 대해 논의한후 합동훈련의 시작을 선언함.
-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1천300명의 육·공군 병력이 참가한 이번 양국 대테러 합동훈련은 지난 2005년 이후 3번째임. 양국은 하바로프스크에서 1단계 전략 훈련을 마친후 2단계 전술과 3단계 전역훈련을 중국 지린(吉林)성으로 옮겨 실시함. 훈련의 중점은 방공, 입체적 돌파, 기동, 포위등 4개 부문임. 인민해방군의 전폭기 1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9일 지린성 타오난(도<삼수변에 兆>南) 훈련기지 상공에서 훈련 비행 도중 추락, 이번 훈련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었음.
- 한편 서방 언론은 이번 중-러 훈련이 냉전시대의 유물을 연상케하는 동맹군 훈련이 아닌가 보고 주목하고 있으나 중국 측 이번 가상적을 상대로 하지 않는 순수한 반테러훈련이라고 해명함. 중-러시아간 이번 반테러 합동훈련은 올해 양국간 실시되는 25차례의 합동훈련의 일환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18일 타지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병력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합동군사훈련에 나란히 참여함.

사. 일·러 관계

● <러-日 영토 분쟁 심상찮다>(7/28)

-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 감정싸움이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27일 러시아와 일본 언론에 따르면 26일 오후 11시께 도쿄(東京) 주일 러시아 대사관에 일본 우익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39)이 북방 영토를 일본에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차량을 몰고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함.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북방영토 반환 거부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려 감정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외교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러시아가 지난 3일 일본 의회에서 북방영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러시아 내 반일 감정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1천600명)의 89%가 일본에 북방영토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63%는 만약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일본에 넘기면 그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답함.
-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11일 법안의 중의원 통과 당시 “부당한 처사로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러시아 하원도 얼마 뒤 “러·일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했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채택함.
- 이달 초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만나 영토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만 확인하고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함.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특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영토문제에 관한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으며 아소 총리 역시 “러시아가 영토문제를 진전시키려는 용의가 없다면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아. 기타

● <러시아의 중앙亞 영향력 확대 쟁점>(7/30)

-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에너지 자원 덕에 급부상하는 중앙아시아 내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1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리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비공식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30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이로 떠남. 크렘린에 따르면 그는 이곳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크 대통령을 비롯해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경제, 군사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특히 이들 정상은 타지크 전력의 아프간과 파키스탄 공급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
- 타지크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연간 12억 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수력발전소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31일 키르기스로 떠나기 전 이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임. CSTO 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해 그루지야 전쟁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CSTO 내 ‘신속 대응군’ 창설 문제를 키르기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타지크,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6개



회원국들과 최종 조율할 예정임.

- 지난 6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벨라루스와 우즈베크를 제외한 5개국이 신속 대응군 창설 협정에 서명함. 1만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은 역내 군사 위협, 국제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사태 등에 공동 행동을 취하게 됨. 일각에서는 신속대응군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안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번 회담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크 대통령의 서명 여부가 주목됨.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통상 마찰 중이며 우즈베크는 독립 외교 노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2개국 방문은 러시아가 구 소련국가들의 ‘중재자(broker)’ 임을 자처하면서 중앙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음. 러시아로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에너지 자원을 이유로 이들 국가와 접촉이 잦은 것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지난달 키르기스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자국 내 미군기지 존속을 결정하자 러시아가 키르기스와 추가 군사 기지 설치 협상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됨.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더는 구소련 국가에 친서방 정부 탄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음. 2003년과 2004년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장미혁명과 오렌지혁명이 일어나 친서방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는 일이 발생했고 그 뒤로 이들 나라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길에 지난 23일 선거에서 승리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키르기스 대통령을 만나 그의 승리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음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모스크바 타임스는 보도함.

● 日 총선 앞두고 우경화 움직임 대두(7/30)

- 8·30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우경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락,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밀리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 내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을 주도하는 정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최근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의 미군 함선 호위 활동을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전함. 현행 헌법 해석은 해상자위대의 이런 활동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음.
-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유



엔현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 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간담회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인정할 대상으로 ▲공해상에서 함께 운항 중인 미군 함선이 공격을 받을 때의 반격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시 타국 군이 공격을 받을 때의 반격 등을 제시함. 간담회는 또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시 미국 조기경계위성의 정보에 의존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 위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청함. 아울러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 완화도 제기함.
-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 등 3개항에 해당되는 국가에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임. 이 원칙은 1976년 미키(三木) 내각에서 적용을 확대,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또 육상자위대는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육상총대' 신설과 해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즉응집단', 수도권 방어를 전담하는 '수도방위집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개정할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전함. 육상자위대의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사상 최대의 조직 개편이 됨. 현재는 방위상을 정점으로 육상막료감부가 설치돼 있고, 현장에는 중앙즉응집단과 동부, 서부, 중부, 동북, 북부방면대가 편성돼 있음. 3월 말 현재 육상자위관은 총 14만명임. 육상막료감부는 최고사령관 역할이 아니라 방위상 보좌역으로 부대 지휘권은 없음.
- 자위대는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부대를 장악하는 최고사령부 설치에 태평양전쟁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전쟁 피해자를 양산했던 구 육군참모본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음.

● **李대통령, 주한대사 6명 신임장 접수(7/29)**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엘리자베스 로랭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신임 주한 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환담함.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주한 대사는 로랭 대사를 포함해 에지문두 수수무 후지타 브라질 대사, 티라쿤 니옴 태국 대사, 에이몬 맥키 아일랜드 대사, 비비 사이드 샤라프 알-알라위 바레인 대사 등임.



● ‘한-아세안 포럼’ 발족(7/29)

- 지난 6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아세안 포럼’을 발족함. 포럼에는 회장인 황우여 의원과 부회장인 이병석 의원을 포함해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송광호 최고위원, 박진정병국 최구식 김영우 조해진 정태근 황영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함. 회장인 황우여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특사로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한 13명의 의원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국회 차원의 한-아세안 외교를 전담할 연구단체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포럼을 구성기로 했다”고 밝힘.
- 특히 포럼은 13명의 대통령 특사단과 아세안 각국과의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등 20여명의 한국 국회의원과 한국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아세안 각국 의회 의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한-아세안 의원회의’(가칭)를 추진중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함. 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를 초청, 포럼 창립 기념 만찬 간담회를 가짐. 간담회에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참석할 예정임.

● <中 17기 4중전회 앞두고 속타는 시진핑>(7/28)

- 9월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진핑(習近平.55) 국가부주석이 속을 태우고 있음. 중국 정치전문가들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17기 4중전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부주석이 공식으로 남아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임명될 것인지에 있다고 28일 말함. 만약 시진핑 부주석이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다면 오는 2012년 정계를 은퇴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이어 중국의 차기 대권 자리를 확실하게 넘겨받게 됨.
- 그러나 시진핑 부주석이 이번에 차기 대권 굳히기에 실패한다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등 경쟁자들과 결사항전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됨. 시진핑 부주석은 지난 2007년 10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에서 공산당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해짐.
- 그는 이어 2008년 3월15일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에 임명되며 당에 이어 정부에서도 제2인자로 올라서 사실상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받았음. 따라서 시진핑 부주석이 이번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까지 넘겨받는다면 당과 정부에 이어 군부에서도 2인자 자리를 굳혀 중국의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경쟁은 마무리되는 셈임.
-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부터 중국의 대권 자리를 넘겨받기 위



해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 행보를 보여온 후진타오 주석도 대권을 장악하기 4년 전인 1999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취임함. 전문가들은 시진핑 부주석이 아직도 당 원로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책도 범하지 않아 3년 후에 중국의 대권을 거머쥐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음.

- 시진핑 부주석은 첫 과제로 맡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며 중국인들의 '100년의 꿈'을 성공시켰으며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건국 60주년 기념식 준비도 도맡고 있음. 한편 중국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주간지 요망(瞭望) 최신호는 오는 9월 개막하는 17기 4중전회에서는 공직자 재산신고제 등 부정부패 근절 방안과 당내 민주화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함.

● 후진타오, 마잉주에 축전..60년來 첫 소통(7/2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주석으로 최근 선출된 마잉주(馬英九) 총통에게 27일 축전을 보내 6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의사소통을 함. 양국의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1949년 중국 공산당과 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온 이후 처음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마잉주 총통에게 보낸 73자의 축전에서 "(중국의)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이 양안 관계를 더욱 평화롭게 발전시키고 상호 정치적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후 주석은 "양 당이 동포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대(大) 중화민족의 부흥을 일궈내야 한다"고 말함. 마 총통은 후 주석의 축전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양안 관계는 1992년 (국교수립 당시에) 도출한 합의에 기반해 평화로운 발전과 상호 공동번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양 당은 현실에 입각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논쟁을 자제하며,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함. 마 총통은 이어 "양 당은 평화를 공고히 하고 지역적인 안정성을 회복하며 양안의 개발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필요하다면 통일을 위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마 총통은 26일 대만 집권 국민당의 주석으로 선출됨.

● 美·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 체결(7/23)

- 미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을 만나 '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에 서명함. 우호협력조약에는 ▲양측간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군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이 담김.



- 특히 이날 협정 체결에는 클린턴 장관이 전날 북한과의 군사협력설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던 국가인 미얀마의 니안 윈 외무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음. 클린턴 장관은 협정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함.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이 지역이 전 세계의 발전 및 번영,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과 맞설 것이라고 강조함.

● 클린턴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왔다”(7/22)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21일 태국 방콕에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돌아왔다”고 표현함. 클린턴 장관은 22일 오전 태국의 한 TV토크쇼에 출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소홀했던 조지 부시 전임 정권과 차별성을 드러냄. 지난 2월 클린턴 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가 아시아였던 점도 이 같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임.
- 클린턴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상호 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또 부시 전 행정부가 미국과 아시아 간 관계를 위해 좀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실수였다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선을 언급하면서 미국인들은 매우 명확한 결정을 내렸다고 답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과 아시아 간 파트너십을 넓히고 심화시킬 적기이며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게 클린턴 장관의 설명임. 그녀는 또 부시 시절 이후 외국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일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지역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중·일+아세안, ‘동아시아 협력성명’ 채택(7/22)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은 22일 오전 태국 푸껫 쉐라톤호텔에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사업계획’을 채택함. 공동성명은 과거 10년간 아세안+3체제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지역협력에 있어 아세안+3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임무, 정치·안보·경제·에너지·지속가능개발·사회·문화 등 분야별 협력 증진 방향, ‘아세안+3 협력 기금’ 설립 추진 등을 담고 있음.
- 사업계획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분야와 방향을 제시한 것임. 참가국들은 또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간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조기 감시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아세안+3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신종플루, 재난관리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함. 23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화상대 10개국, 그리고 북한과 몽골 등 27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림.

● 한-베트남 FTA 발효 2년...교역 76% ↑ (7/21)

-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2년 만에 양국 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이 21일 한-베트남 FTA 발효(2007년 6월29일) 2년을 맞아 양국 간 교역동향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교역액은 179억 달러로 발효 전 2년간의 107억 달러에 비해 76%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이 20% 증가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 FTA 발효 전 1년간 34억 달러 흑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발효 후 1년간 60억 달러 흑자를 보였고 2년차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44억 달러로 약간 감소함. FTA 발효 후 2년간 베트남으로 수출한 품목은 석유제품이 21.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기계·컴퓨터, 자동차, 편직물, 플라스틱 제품, 철강 등이었음. 특히 자동차는 FTA 발효 전 2년간 수출액이 4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발효 후 2년간 13억 7천만 달러로 228% 증가함.
- 수입 품목은 어류가 1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유, 전기제품, 석탄, 신발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석탄은 FTA 발효 후 수입이 221%나 증가함. 양국 간의 FTA 발효 후 2년간 베트남에서 관세 특혜를 적용받은 수출액은 2억 7천만 달러로 이중 전기제품이 가장 큰 혜택을 봤고 베트남 수입물품 중 국내에서 특혜를 적용받은 금액은 17억 달러이며 어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 수입물품에 제공한 특혜가 우리나라의 수출품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일정이 개발도상국인 베트남보다 빠르기 때문임. 한편 관세청은 한-베트남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베트남 현지의 통관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30일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11월 호찌민에서 FTA 설명회를 열 계획임.

● 美-印, 국방·핵 분야 협력 합의(7/21)

- 미국과 인도가 국방 및 핵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기로 합의함. 인도를 방문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S.M. 크리시나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촉진과 미국 기업의 인도내 원전 건설을 골자로 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미국산 첨단 무기의 대인도 판매를 위한 안전장치인 ‘최종 사용 감시(end use monitoring)’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미국과 인도는 더 큰 틀에서 국방 분야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최종 사용 감시’는 미국이 수출한 첨단 무기가 악용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판매된 무기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재판매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음.
- 이날 합의로 양국은 최신예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무기를 거래할 수 있게 됨. 특히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 미국 전투기 제조업체들은 사상 최대규모인 인도의 전투기 교체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됨. 또 인도가 미국 기업에 원전 건설에 관한 독점 권한을 부여한 이날 합의로 양국은 지난해 민간 핵협정 체결후 처음으로 민간 핵 기술 거래의 물꼬를 튼. 이 밖에도 클린턴 장관은 이날 만모한 싱 총리가 오는 11월24일 미국 국빈방문을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힘.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싱 총리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첫 외국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함.

● 美 국무부 예산 25% 증가(7/20)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적극 추진하면서 미 국무부의 내년 예산도 25% 증가함. 최근 미 하원 및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무부 및 외교 관련 예산은 510억달러로 작년 407억달러에 비해 25% 증가했고, 2005년에 비해서는 거의 50% 증가함. 내년 국무부 예산에는 1천 300명의 외교관 증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대외지원 및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음.
- 국무부의 제이콥 루 관리담당 부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대외이미지 변화를 추구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중대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말함. 국무부의 예산 증가율은 국방부의 예산 증가율을 앞지르는 것으로 내년 국방예산안은 2% 증액에 그쳐 6천640억달러 규모임. 이중 전쟁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예산의 경우 4%, 205억달러가 증액됨. 총액면에서 볼때는 국방부 예산이 국무부에 비해 13배나 많지만 의회가 외교관련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중인 외교관 증원과 대외개발원조 증액을 승인한 것은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관행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임.
- 특히 의회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관련 예산을 소폭 삭감하며 행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승인함. 상원의 외교관련 세출예산은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에 비해 2% 모자라는 8천240억달러임. 또 전통적으로 대폭적인 삭감대상이 되어온 대외원조예산은 323억달러로 2009년 340억달러에 비해 약



간 감소했지만 2008년의 267억달러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한 것임.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마크 그로스맨은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 시절에도 국무부 예산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예산에 포함된 것이었다고 밝힘.

● 인도 “중국을 경계하라”(7/20)

- 인도는 중국이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해군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자 위협을 느끼고 중국의 미사일과 해군력 증강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인도 내각의 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 미사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수집센터를 창설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의 쓰촨신문왕(四川新聞網)이 20일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인용, 보도함.
- 정보수집센터는 중국의 미사일과 핵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 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하는 한편 인도 중앙정보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든 계획임. 인도의 정보수집센터설립안은 중국이 최근 칭하이(靑海)이 사정 5천km의 미사일을 새로 배치했는데도 인도 정보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됨. 사정 5천km의 장거리 미사일은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등 4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 이중 3개국은 중국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결국 인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 당국의 판단임.
- 인도는 또 중국이 인도양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와 관련, 인도양에서 해군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립할 계획임. 앞서 인도는 지난 6월 중국과의 국경 지대인 북부 아삼주(州) 테즈푸르 공군기지에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이-30 MKI 5대를 배치함. 인도는 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 병력 6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중국의 통신 설비기업인 화웨이(華爲)와 휴대전화 메이커인 중흥(中興)의 자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음.

● 아세안, 인권위원회 설립키로(7/20)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회원국은 역내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립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20일 보도함.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9일 태국 푸껫에서 열린 외교장관 실무회담에서 아세안 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데 합의한 뒤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인권위원회 설립을 공식 승인할 예정임.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권위원회 설립이 공식 승인되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아세안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에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아세안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 등 2천여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는 미얀마를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 등이 포함돼 있음.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20일 오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초창기에 아세안 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보다 인권을 촉진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인권보호 부문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밝힘. 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아피싯 총리는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이 촉진되면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도 생길 것”이라고 말함. 카시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은 “인권위원회가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세안 회원국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함.



[참고 1] <日 민주당 한반도 관련 공약 요지> (연합뉴스, 7/27)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내달 30일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에 맞춰 분야별 공약을 27일 발표함. 공약에는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의 부당성은 물론 독도의 일본 영유권도 명기돼 있음. 다음은 민주당의 한반도 관련 공약 요지.

◇**아시아 관계** = 중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해구조, 전염병 대책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한다. 아시아·태평양 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의 투자, 노동, 지적재산권 등 넓은 분야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일 관계** =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하므로, 양호한 한일관계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국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한·중·일 3개국의 강력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한일 FTA 체결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 등에 나선다.

◇**북한문제** =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의 개발, 보유, 배치를 포기하도록 미국·한국·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납치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

◇**영토문제** = 영토문제 해결은 곤란을 동반하는 동시에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의 조기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대화를 거듭한다.

◇**야스쿠니(靖國)신사** = 야스쿠니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서 총리나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든 거리낌없이 전몰자를 추모하고, 비전(非戰)과 평화를 맹세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영주 외국인 지방 선거권** = 민주당은 창당 시 기본 정책에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밝혔으므로, 이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아간다.

choinal@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27/0503000000AKR20090727187000073.HTML>



[참고 2] <美-中 전략경제대화 합의 요지> (연합뉴스, 7/29)

미국과 중국은 27~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광범위한 분야의 세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합의함.

◇ 경제

-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세계 최고의 신흥국가인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 내수 경제의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회복 후에도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금융 규제·감독 개선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조한다.
- 세계 무역 및 투자를 더욱 개방시키는 데 협조하고, 보호주의에 맞서 함께 싸운다.
-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다국간 대화에 협력하고, 중국 등 신흥 국가의 높아지는 영향력이 반영되도록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효과성과 합리성을 개선하는 데 협력한다.

◇ 전략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양국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은 세계 최고의 탄소 배출국으로서, 오는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나올 새로운 국제 조약에 조인하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 내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검토하기에 앞서 핵무기 확산이 저지되도록 함께 힘쓴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미-중 대화를 강화한다. 전쟁으로 피폐화된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빠른 안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수단 정부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내년 베이징에서 다음 대화를 개최하고, 그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함.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29/0503000000AKR20090729137100009.HTML>